

의안 검토 보고

의안 번호	제 253호		
건 명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서초구청장	제안(출)년월일	2002. 5. 2.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김 재 근		

1. 검토내용

가. 제안이유

우리구 고용직(지도원)의 정년이 현행 52세로 사회활동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나이에 퇴직하게 됨으로써 자녀교육과 생활에 대한 불안으로 저하된 사기진작을 위해 정년을 연장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고용직 공무원의 직명별 근무상한 연령을 52세에서 55세로 조정(안 별표)

2. 검토결과

가.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98. 10. 2부터 고용직(지도원)공무원의 정년을 53세에서 52세로 1년 단축하여 시행하여 왔던 바, 사회활동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연령에 조기퇴직을 하게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정년을 연장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나. 주요내용은

고용직(지도원) 공무원의 정년을 52세에서 55세로 3년을 연장하는 내용임
(안별표)

다. 검토결과 의견

- 본 개정조례안에 따른 그동안의 경과 및 현황을 검토한 바,
- 1998. 10. 2. 전국적으로 시행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종전의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년을 1년 단축(53세→52세) 하였으며,
- 2000. 2. 16. 서초구의회에 지방고용직(지도원) 공무원 근무상한 연령을 현행 52세에서 57세로 개정요청하는 청원을 서초구소속 지도원 이봉주의 151명의 청원이 접수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중 보류되었으며,
- 2002년 4월 현재 우리구 지도원의 현황은 정원 112명, 현원은 111명으로서 현행 조례 적용시 예상퇴직자는 2002년 상반기 5명, 하반기 6명으로 2002년 11명, 2003년 18명, 2004년 13명임.
- 고용직공무원(지도원)의 정년을 타구와 비교(2002. 5. 2. 현재)하면
 - 57세 : 종로, 용산, 강북, 은평, 노원, 영등포 등 6개구
 - 56세 : 광진, 마포, 동작 등 3개구
 - 55세 : 성동, 서대문, 강서, 구로, 관악, 송파, 강동 등 7개구
 - 54세 : 중구
 - 53세 : 성북, 도봉, 양천 등 3개구
 - 52세 : 동대문, 중랑, 금천, 동작, 강남 등 5개구이며
- 정년연장을 위한 년도별 조례개정 자치구 현황은
 - 1999년 : 용산(57세), 노원(57세), 강동(55세)
 - 2001년 : 성동(55세), 서대문(55세), 관악(55세)
 - 2002년 : 종로(57세), 강북(57세), 은평(57세), 마포(56세), 영등포(57세), 송파(55세) 등 1999년 이후 총 13개구에 이르고 있음.

○ 본 조례안 개정시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 장점으로는

- 지도원의 근무연령 연장으로 제안이유와 같이 생계안정 등으로 사기 진작과 친절봉사 및 능률향상
- 숙련된 소요인력 확보 및 고용안정
- 정년이 연장된 서울시 타구청과 형평성 유지

- 단점으로는

- '98. 10. 2. 당시 구조조정명분 퇴색 및 기 퇴직자와 형평성 문제 발생
- 호봉누적 등 인건비 증가등임.

○ 위 내용을 종합 검토한 바,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로 되어 있고,
-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의 현행 52세는 사회활동을 가장 많이 할 시기에 퇴직하게 되어 자녀교육 및 생활에 대한 불안으로 사기저하라는 문제 점이 있다는 집행부의 조례개정내용이 타당한 점이 있으며,
- 서울시 타구청에서 55세이상 57세까지 정년을 연장 또는 유지하는 구가 서울시 자치구 25개구중 16개구에 달하고 있어 이들 구청과 형평성 유지
- '98. 10. 2. 구조조정당시 경제 보다 현재의 경제가 가시적으로 호전된 점과 정년연장에 따른 사기진작으로 행정의 능률성, 고용안정등의 긍정적인 면 그리고 당시 구조조정명분 등을 종합하여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별표 하단에 현행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비고 : 지도원은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자를 임용함에
그친다” 를 삽입하여 존속시켜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항
- 지방자치법 제15조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

제2조 (공무원의 구분) 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 12. 30〉

3. 기능직공무원: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1. 5. 31, 1997. 12. 13, 1998. 9. 19〉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나.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가. 비서관·비서

나. 삭제 <1994. 12. 22>

다.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년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82. 12. 28, 1998. 9. 19> [전문개정 1981. 4. 20]

< 지방자치법 >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